

## 종교인과 종교언론의 사회 통합적 역할 -종교신문을 중심으로

A Role of Religionists and Religious Newspapers for the Harmonious  
Society of Korea

박 광 수  
(한국, 원광대학교)

---

《 Abstract 》

---

Korean religionis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human rights and dignity, freedom and equal rights, and other social issues. Recently, ei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religionists have strongly shown their different approaches in solving social issues, i.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connec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 few religious leaders' public views have been misused by some politician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in religious newspapers how to bring a harmonious resolution among the people who are either in conservatism or in progressivism.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is both to respond to the timely situation of civil society an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the society.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Some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should not provide one-sided prejudice bu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its righteous analysi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lso, religious newspapers should open a field of discussion how to resolve some issue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freedom.

---

**\*key words:**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social harmony, national security law, religious newspaper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종교인, 종교언론인, 사회통합, 사회참여, 국가보안법, 정교분리정책, 언론(言路) 소통.

## I. 들어가는 말

종교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각종집회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평화, 인권 및 생명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 자체를 추구하면서도 남북한 자주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진보적 입장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반대하여 국보법을 수호하고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종교단체들의 대대적인 비상시국선포기도회<sup>1)</sup> 등은 진보와 보수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분열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문제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한쪽에 편향된 입장발표 등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본질적인 의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종교인과 종교언론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종교의 사회참여는 시대적 상황과 일반 시민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종교인과 종교언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양심의 소리, 정의의 외침과 실천을 통해 사회분열의 병(病)적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교분리 정책의 비판적 성찰을 개략적으로 시도하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보와 보수적 종교계의 성향을 살펴보면서 시론과 토론 마당을 통해 흩어진 민의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 II. 한국 정교분리 정책의 비판적 성찰

: 종교의 정치도구화와 정치세력화를 넘어서기 위해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는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의 일치,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의 이용, 정치권력에 대한 종교의 도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sup>2)</sup>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의 일치는 정치와 종교가 미분화된 사회에서 발견되며, 이용 또는 도전의 관계는 정치와 종교가 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 2004.10.4, 서울 시청앞 광장.

2) J. Milton Yinge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London: Macmillan, 1970, pp.409-424; 노길명, 〈광복이후 한국 종교와 정치간의 관계 -해방공간부터 유신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27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년 여름, 1-2쪽.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신념 및 권위를 분리시킴으로써 국가와 종교가 상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집단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거나 억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독교권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세속권력을 대표하는 정치의 권력과 신의 권리는 교회가 대표한다는 오거스틴(St. Augustine)적인 이원적 질서관에 입각해서 해석된다.<sup>3)</sup>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교분리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개괄해 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 1. 일제치하의 정교분리정책

한국이 외세의 강압에 못 이겨 불완전하나마 타율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처음 도입한 것은 개항기 한불조약에서부터이다. 윤이흠은 오거스틴의 이원적 질서관을 바탕으로 유럽의 기독교권은 “피선교지의 세속문화를 상위질서인 신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과제라고 믿고 선교사들이 군함에 실려 지구의 끝까지 가게 한 사상적 근거이다.”라고 보았다.<sup>4)</sup> 정교분리의 명목아래 교회는 세속적 권력의 힘을 대변하는 무력적 함포의 힘을 이용하여 한불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36년간의 통치기간동안 조선총독부는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하였고, 모든 교육제도는 일본의 ‘대동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며, 우리의 말과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은 찾아볼 수 없는 체제로 변화였다. 일제 점령하에서 기독교, 불교 등 기성종교 만이 인정되었으며, 기타 민족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들에 대해 ‘사이비종교’ 또는 ‘유사종교’라는 명칭을 부과하여 탄압을 하였다. 일본의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신앙을 강요하였고, 불교에 대해서는 사찰령을 시행하고 대처승제도를 도입하고 친일승려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하였다. 일제는 한국불교계의 총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 권력을 형성하여 중앙통제를 쉽게 하려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일본식 황도불교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능화의 ‘政敎分離의 원칙’을 주장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sup>5)</sup>

3) 김용복, <해방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2, 238-244쪽.

4)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86, 239쪽.

5) 일제치하에서 朝鮮史編修會 委員로 일한 이능화는 친일인사로 평가되고 있지만, 학문적 영역에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능화는 당시 政敎分離의 원칙을 주장하였으며, 역사적으로 政敎分離의 원칙은 정치의 세속적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동시에 확보하기

## 2. 해방후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정교분리정책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된 동서냉전체제는 북위 38선을 기점으로 한 남북한의 분단과 함께 북의 소련진주와 남의 미국의 군정정치가 이루어졌다. 1945년 8·15광복 후 동서냉전체제의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치전략은 남북한 분단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친미·반공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노길명은 미군정의 통치전략에 의한 종교 정책을 “친미·반공이데올로기의 관철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들은 지원하고 그에 반대하거나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종교들은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본다.<sup>6)</sup> 미군정의 교육정책에 참여한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건국이념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러나, 미군정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정책을 폈으며, 민족의 자주성이나 독립성보다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명목으로 일본식 교육 대신 미국식 교육방법을 우선적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였다.<sup>8)</sup>

미군정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선호하는 종교정책을 펼쳤다. 강돈구의 지적대로, 기독교 공인교적 정책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미군정의 종교정책에 따라 개신교는 다종교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물적 토대를 닦게 되었으며,<sup>9)</sup> 천주교의 경우에도 비슷한 혜택을 누렸다. 반면, 유교 및 불교 등 전통종교, 그리고 독립운동과 민족

---

위한 것임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능화는 당시 조선조말 중국을 포함한 세계정황에 따른 한국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이루어야 할 방향을 뚜렷이 제시한 것이다. 유교를 국교화해서는 안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신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국제적 상황에 대해 소개한 것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의 神道を 한국에 전파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막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 6) 노길명, 앞의 글, 3-4쪽.
- 7) 조선교육심의회(1945년 11월 23일-1946년 3월 7일)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서 채택하였다.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292-293쪽.
- 8) 미군정은 우리 나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한국인이 아닌 해리 B 엔스테드 미 육군 대위를 선임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교육을 미국식 교육체제로 바꾸었다. 최병철,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9권, 1999, 15쪽; 손인수, 앞의 책, 295쪽; 김인희, 〈교육목적관의 변천과정〉, 〈한국신교육의 발전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01쪽.
- 9)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제1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93, 26-42쪽.

자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대종교와 천도교 등 자생 민족종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도 찬성하지 않았으며 친미성향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정은 민족종교와 전통종교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정치권력에 종속되도록 꾀하였다.

광복직후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의 주도세력 중 상당수의 좌익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미군정 당국은 불교혁신운동의 주축을 이루던 조선불교혁신회를 좌익으로 지목하여 1946년 말에 해산시켰으며,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불교에 대한 ‘정화유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가 시작되게 하였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진 초법적인 정치 간섭은 불교내의 분규를 절정에 달하게 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대종교 관련 인사들과 남한만의 단정(單政)수립에 반대하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3.1 재현운동’(1948년)을 전개한 천도교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sup>10)</sup>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헌 헌법 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정책을 명백히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당시 미군정의 압도적 영향 아래 미국식 정교분리 원칙만 헌법조문에 삽입했을 뿐,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간결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당시, 미군정은 한국사회에 성숙하지 않은 정교분리의 정책을 토대로 기독교를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편협하게 적용시켰으며, 유교와 불교 등 전통종교들에 대한 중단 분규 조장과 정치적 대항력의 약화를 통해 국가권력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분할-통제(divide and control) 정책’을 시행하여<sup>12)</sup>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견제하면서 정치적인 활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장면정권은 짧은 통치기간동안 개신교와 함께 특히, 천주교를 선호하는 정책을 폈다.

### 3. 군사정권하의 정교분리정책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제1조)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제2조) 함으로서 친미·반공이데올로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조기 집행과 반공을 국시로 하여 정권에 위협이 되는 민간사회 및

10) 노길명, 앞의 글, 6-8쪽; 홍장화, 《천도교운동사》, 서울: 천도교총부, 1990, 212-216쪽.

11) 한국종교연구회, 《한국 종교 문화사 강의》, 서울: 청년사, 1998, 458쪽.

12) 노길명, 앞의 글, 9쪽.

종교단체 등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친(親) 전통종교·반 기독교적 성향이 짙게 나타났다.

노길명이 지적한 대로, 박정희 정권의 종교정책은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승인을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였다. 1961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단체 및 각 종교단체들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종교단체가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외형적으로 불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불교재산관리법과 향교재산법을 제정하여 불교재산과 유교의 재산을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정치 권력이 종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sup>13)</sup>

물론, 개신교 및 천주교와의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불러왔지만, 전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 위기상황에서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도계 신종교 계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통일교의 경우, ‘국제승공연합’을, 새일수도원에서는 ‘멸공단’을 조직하여 활발한 반공(反共), 승공(勝共), 멸공(滅共)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sup>14)</sup>

박정희 군사정권이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신군부는 종교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1980년 10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불교 조계종의 내부갈등에 직접 개입하여 전국 3천여 사찰에 대해 일제히 수색하였으며, 스님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을 연행하는 불교계의 이른바 ‘10·27 법난(法難)’ 사태를 일으켰다. 유교인사들이 ‘향교재산법’의 관련사항을 고쳐 전국적인 유교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고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 법적 장치로 기능해왔던 ‘불교재산관리법’과 ‘향교재산법’을 그대로 유지시켰다.<sup>15)</sup>

13) 노길명, 앞의 글, 13-14쪽; 윤승용,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107쪽.

14) 기독교계 신종교들에서 반공 교육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운몽의 용문산기도원, 문선명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 현 세계평화통일가정협회), 양도친의 한국기독교전도협회(후일 세계일가공회, 우주일주평화국을 거쳐 현재는 대한일주평화국), 이유성의 여호와의 새일교단 등이 있다. 통일교의 국제승공연합의 경우만 살펴보면, 공무원·기업인·군인·경찰·향토예비군·교사·학생·새마을지도자·근로자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하여 승공사상 세미나·승공강연·승공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1979년 말 까지, 이 단체는 전국 175개 시·군과 세계 127개국에서 지부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승공교육 이수자는 총 1천 9백만 명에 이르렀다. 김홍수, 〈한국전쟁의 충격과 기독교회의 기복신앙 확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1998, 103쪽; 노길명·이재민, 《통일교, 그 실상과 오해》, 서울: 사목연구소, 1991, 80-81쪽.

또한, 1980년 ‘사이비 종파규제’를 명분을 내세워 종교 전반을 통제하려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1983년의 ‘6. 20사업’은 3군 본부의 이전을 명목으로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70여개 군소 종교의 시설들을 모두 강제적으로 철거시킴으로서 자생 민족종교들의 기반을 와해시켰다.<sup>16)</sup> ‘기독교방송(CBS)’에 대해 보도 및 광고방송 금지조치를 내렸으며, 개신교 계열의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철폐 등 초강경의 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종립(宗立)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1980년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sup>17)</sup>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조계종 총무원 지도부는 정치와 유탁하기도 하였으며, 개신교계에서는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 모임 등을 통해 군사정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군사정권하에서의 여러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추진한 1970-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통한 현재의 민주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민주화운동,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제단, 불교실천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의 조직적 활동을 통한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 4. 민주화정권하의 정교분리정책

한반도의 남북 분단체제하에서,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등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정부 모두가 자신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였으며, 종교계도 이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 한국사회의 정교관계는 정교분리(政教分離)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논리(狀況論理)에 따라 좌우되어 왔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sup>18)</sup> 서술한 내용이 해방이후 반세기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영삼 정권 당시는 상대적으로 종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남북한 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만을 허용하였다. 북한이 1995년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극심하였을 때, 남한의 종교계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중심

1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서울: 민족문화사, 1991, 59쪽.

16) 현재로는 유일하게 수운교만이 오랜 법정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17) 강인철, 〈민주화 과정과 종교 -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27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여름, 32-33쪽.

18) 서울, 한국종교학회, 앞의 책, 456-457쪽.

으로 1995년 10월에 ‘범종단 북한수재민 돕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종단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구입한 밀가루를 한국적십자를 통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십자사의 단일 창구를 통한 대북지원만을 허용하여, 당시 종교계는 김영삼 정권의 대북창구단일화에 반대하여 대북지원과 교류의 다양화를 위한 ‘범국민 백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많이 완화된 반면, ‘남남간의 갈등’으로 표현된 남한내의 내적 갈등과 대립은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로 다른 통치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려는 정치적 노력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서’이후, 이러한 종교계의 노력은 1997년에 ‘우리 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종교계와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본격화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치적 고위급회담과 경제 회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교류, 경제교류, 학술 및 문화 교류, 종교인간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2001년에 접어들면서 7대 종단이<sup>19)</sup> 민간통일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던 남한의 민간통일운동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여 ‘6·15 일주년 기념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8·15 평축)’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 사회 내에 종교의 역할과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비록 2001년 ‘8·15 평축’이 우리 사회 내의 일부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 폄하되고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종교계가 남남 또는 남북간의 최악의 혼란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남북대화과 교류는 반공의 영역에서 남북분단 체제 이후의 한민족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평화공존의 장을 열어놓았다고 평가된다.

19) 7대 종단이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등 우리 사회 내의 종교대화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종단 즉 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을 말하며, 이들 7대 종단은 각 종단의 수장들이 이러한 종교협력기구에 직접 참여하여 종교간 상호협력과 이해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 Ⅲ. 현 한국사회의 갈등 현상

: 남북한 평화와 국보법 폐지

어느 한 정권만의 책임이 아닌 국내의 지속적인 문제이지만, 노무현 집권하에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평화의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해법 차이, SOFA의 불평등 조약, 한국전쟁 무렵 이후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미군 장갑차로 인한 ‘두 여중생(신효순·심미선) 사망 사건,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협상 문제, 미국의 통상압력, 이라크 파병문제 등 다방면에서의 갈등이 심하게 노출되었다. 정치·경제·민생 등의 문제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대응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물려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정부의 개혁의지는 행정수도 이전의 실패와 언론개혁, 국보법폐지, 사립학교법 제정 등의 담보 상태는 정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역으로 위태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법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실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진보적 개혁 성향을 가진 종교계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종교계 인사들은 안보우선의 논리로 폐지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교계가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협의회에서의 국가보안법폐지,<sup>20)</sup>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위원회 설치, 부패 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 입법 관철을 위한 범종교인 기원대회<sup>21)</sup>,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sup>22)</sup>,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불교서명운동본부”<sup>23)</sup>,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기독교운동본부’ 출범<sup>24)</sup> 등 한

20)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교계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일치,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함세웅 신부 등 4명)는 지난달 22일 서울 상도동성당에서 종교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평화신문》 518호 (발행일, 1999/03/07))

21) 《평화신문》 610호 (발행일, 2001/01/14)

22) 《평화신문》 537호 (발행일, 1999/07/18)

23) 불교계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하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한불교청년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불교신문》 2063호, 2004/09/14) 불교인권위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불교평화연대, 동산반야회 등 10여 개 불교단체는 2004년 9월 17일 서울 종로 느티나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불교서명운동본부(상임대표 진관, 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주간불교》(<http://www.bulkyonews.co.kr>, 2004/09/24); 《불교신문》 2065호(2004/09/21)

24) 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가 지난 10월 15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출범 기도회를 가졌다. 《종교신문》 (2004/10/28, <http://www.jksm.com>)

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보법 폐지 운동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한쪽에서는 반전평화기독교연대를 중심으로 한 반전 평화기도회, 다른 한쪽에서는 보수적인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반핵 반김 평화기도회’가 있었다.<sup>25)</sup>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2004년 9월 9일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포함해 정·관계 법조계 등 각계 원로 인사들이 ‘6·15공동선언 파기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0월 4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전직 총리, 관료, 재향 군인 출신 인사 등 보수단체 회원 등 10만 여명이 서울 시청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한미동맹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등을 주장했다.<sup>26)</sup>

이런 와중에,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하상신앙대학 강의에서 “국가보안법이 언젠가는 없어져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필요하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sup>27)</sup> 이러한 입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났을 때도 확인되었다. 김추기경의 보수적 입장은 가톨릭내에서도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원불교의 경우,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대학생연합회 등 비교적 젊은 층은 환경·생명·인권 및 평화 등에 대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국보법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도층 인사들은 대체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IV. 갈등을 해결할 해법에 대한 제언

##### 1. 한국의 종교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에 보편적 시대정신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의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종교인간의 대화와 협력이 보다 요청된다. 한반도 평화실현의 문제는 정부의 외교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SOFA 한미협정, 한국군 이라크 파병, 핵폐기장, 새만금 개발, 인권문제, 빈부

25) 민성식, <사회변혁 위한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 준비시작> 《한국시민사회연감 2004》, 시민의 신문, 2004, 378-382쪽.

26) 《시민운동연합신문》(2004/10/05, <http://www.ngonews.co.kr/>)

27) 《평화신문》 791호(2004/09/26).

격차, 국보법 폐기, 부시 재집권 이후의 한반도 평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각 종단내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원용 목사가 주관하는 평화포럼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sup>28)</sup> 냉전체제를 넘어, 평화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한반도평화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서울에서 ‘아시아 공동의 집-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종교평화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종교계 인사들과 학자, 그리고 일부 정치계 인사들은 한반도 평화가 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중요한 축이 됨을 논의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미국대통령이 한반도평화를 위해 어떠한 전쟁의 위협도 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불교계에 있어서 서울에서 열린 제 11차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에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sup>29)</sup> 제 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지난 2004년 10월 22-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인민대회당에서 3국 불교대표들이 후이량위 부총리를 예방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계종의 법장 총무원장은 중국의 동북아평화를 위한 북핵문제에 대한 능동적 협조를 요청하면서, 중국의 동북정책과 고구려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3국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 평화공존과 3국 불교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중관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한 점이 돋보인다.<sup>30)</sup>

국제 종교협력기구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ACRP)와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의 경우에도 한국종교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WCRP에서는 9.11 사태직후인 11월에 세계종교인 대표들이 뉴욕에서 모여 ‘거룩함’을 표방하는 어떠한 테러도 전쟁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었다.<sup>31)</sup> 부시정권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UN과 함께 이라크 전쟁이후의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들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28) 2001년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국제평화회의, 2002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란 주제로 국제 NGO 지도자 Workshop, 2003년 ‘냉전에서 평화로: 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의 역할 (From Ceasefire to Peace : Peace Making Role of World Religions)’를 주제로 국제종교평화회의를 개최하였다.(<http://www.peaceforum.or.kr>)

29) <서울평화선언문-2003참여불교세계대회> <http://www.jungto.org/gf/kor/inebstate-kor.html>

30) <<한겨레신문>>2004/11/04(<http://www.budgate.net/Scripts/news/bud.asp?id=31125>)

31) <<한겨레신문>>2001/12/01 16면

2. 종단내 언로(言路)를 열어놓는 기능을 하고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신문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과 수행, 행사 등에 대해 소식을 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신문별로 특징이 있으며, 종교신문의 향방을 가름하기 위해서는 신문 전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2004년도 사설(社說)을 중심으로 종교신문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종교신문 - 개신교·천주교

기사내용	종교신문 - 개신교·천주교 (2004년도 1월-11월 사설)			
	기독교신문	교회연합신문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1. 종교(종단내)	33.8%	31.0%	40.2%	51.9%
2. 환경·생명	0.0%	0.0%	8.4%	9.9%
3. 여성·교육·가정	7.8%	1.4%	8.4%	9.9%
4. 평화·통일(남북)	7.8%	5.6%	4.7%	3.8%
5. 정치·종교정책	11.7%	18.1%	2.8%	2.5%
6. 인권·노동	0.0%	0.0%	1.9%	2.5%
7. 복지·이웃	3.9%	0.0%	8.4%	1.2%
8. 국제연대·협력(종교)	1.3%	1.4%	0.9%	2.5%
9. 사회·문화·언론	6.5%	9.7%	1.9%	4.9%
10. 국보법·사학법	0.0%	4.2%	1.0%	2.5%
11. 기타	27.3%	29.2%	21.4%	11.1%
계 (사례수)	100.0% (77)	100.0% (72)	100.0% (107)	100.0% (81)

개신교계 신문 중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교회연합신문사, 한국교회신문사, 기독교신문사, 기독교연합신문사, 들소리신문사, 새누리신문사 등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신문》, 《기독교연합신문》, 《교회연합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독교신문》은<sup>32)</sup> 교회내의 일에 대해

32) 《기독교신문》은 사설에서 감사절 유감, 교회세무사찰 유감, 총회, 불법타락선거, 그릇된 ‘교회 성공관’, 사랑의 나눔 실천, 거룩하고 경건한 성탄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변화 필요 등 교회자체내의 문제와 통일선교, 중동선교, 여름성경학교 등 선교에 관련하여 글을 쓰고 있다. 대사회적으로는 “여야가 대화로 ‘국가보안법’ 타협을”(09/21), “탄핵정국, 나라위해 기도하자”(04/14) 등의 주제로 미약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론>이라는 시사 칼럼에서 ‘해방 59주년과 한국교회 통일운동’(08/16),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존재’(10/26), ‘사회 참여로 빛과 소금의 역할’(10/18), ‘나라 사랑의 길’(07/15) 등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사랑의 실천, 영적인 웰빙(Well-being)생활,

중점을 두고 있으며(33.8%), 기타 내용에서도(27.3%) 교계관련 소식을 담고 있다. 환경과 생명분야 및 인권·노동에 대한 내용을 사설에서는 다루지 않는 반면, 정치(11.7%), 여성·교육·가정(7.8%), 평화·통일(7.8%)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그 어느 종교언론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연합신문》의 경우,<sup>33)</sup> 교회내의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약간씩 다루고 있다. 《교회연합신문》의 경우, 교회내의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31.0%) 기타 내용도(29.2%) 교계소식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다른 여타 기독교 관련 신문보다 정치분야(18.1%) 및 사회·문화(9.7%)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기독교정당에 대해 5회 언급하여, 기독교의 정당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국보법이 국가의 안위에 크게 위협하다는 논조를 적극 펴고 있다. 사학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평화신문》과 《가톨릭 신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평화신문》은 교회내의 일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40.2%), 여성·교육·가정(9.3%), 환경·생명(8.4%), 복지·이웃(8.4%)의 문제에 주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화·통일(4.7%) 및 정치(2.8%)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문화(1.9%), 국제연대·협력(0.9%)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4)</sup>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1.0%), 국보법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가톨릭 신문》은 신앙, 복음화 등 교회내의 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51.9%), 환경·생명(9.9%) 및 여성·교육·가정(9.9%)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루 관심을 갖고 사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복지·이웃(1.2%), 국제연대·협력 분야(1.2%)

---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가정 및 노인복지, 부활, 사순절, 교회선교 등 교회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써나가고 있다. (<http://www.gidoknews.co.kr>)

33) 《기독교연합신문》은 교단내적으로 가정예배, 미자립 농어촌 교회, 노숙자, 고난받는 자, 고령화사회, 스포츠 선교, 교회의 진솔한 반성, 영성회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탈북 청년층, 중국 선교,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시론(時論)의 경우, ‘량강도 폭발이 주는 교훈들’ ‘화해와 일치, 교회가 모범되자’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교 내지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http://www.ucn.co.kr>)

34) 《평화신문》의 사설 내용 중, 교회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신도 주일, 문화복음화, 어린이 미사, 사랑의 가족열차, 평신도 선교사, 신영성운동 대책, 목주기도, 새로운 복음화 길, 군인주일, 청소년과 순교 영성, 울산지역 공소 살리기 운동, 안성 대천동분당 선교운동의 교훈, 순교자와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자녀 신앙교육 못자리, 군중교구와 민간교구의 공조사목, 여성사목 등 종교적 신앙과 의례, 복음화, 그리고 교회내의 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형폐지(02/22), 북녘형제와 고통나눔(05/02), 이주민 보호(08/15), 민족통합교육(08/22), 의료 윤리와 태아 진단(11/07), 사학법 개정반대(11/07) 등 국내의 문제와 이란 이제민 돕기(01/04)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http://www.pbc.co.kr>)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5)</sup> 국보법과 사학법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관련한 종교신문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2) 종교신문 - 불교·원불교·천도교

기사내용	종교신문 - 불교·원불교·천도교 (2004년도 1월-11월 사설)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원불교신문	신인간
1. 종교(종단내)	33.9%	27.4%	37.5%	50.0%	34.5%
2. 환경·생명	5.8%	7.1%	12.5%	1.4%	3.5%
3. 여성·교육·가정	5.8%	6.0%	7.5%	5.4%	17.2%
4. 평화·통일(남북)	3.5%	0.0%	10.0%	1.4%	6.9%
5. 정치·종교정책	5.3%	9.5%	0.0%	0.0%	6.9%
6. 인권·노동	1.2%	0.0%	7.5%	1.4%	3.5%
7. 복지·이웃	4.1%	2.4%	7.5%	5.4%	3.5%
8. 국제연대·협력(종교)	3.5%	6.0%	0.0%	2.7%	6.9%
9. 사회·문화	12.3%	9.5%	10.0%	9.5%	6.9%
10. 국보법·사학법	1.8%	0.0%	0.0%	0.0%	0.0%
11. 기타	22.8%	32.1%	7.5%	20.3%	13.8%
<b>계 (사례수)</b>	100.0% (171)	100.0% (84)	100.0% (40)	100.0% (74)	100.0% (29)

불교계의 경우,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원불교신문, 신인간 등이다. 불교의 《불교신문》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종단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면서(33.9%), 사회·문화(12.3%)에 대한 관심이 높다. 환경·생명(5.8%), 여성·교육·가정(5.8%), 정치·

35) 《가톨릭 신문》 사설에서 문화 복음화, 가톨릭적 대중문화비평, ‘죽음’묵상, 신앙성숙, 성체성사, 복음선포, 생명교육, 순교정신, 주일미사, 가정 복음화, 스포츠 사목, 깨어있는 신앙생활, 청소년사목, 회개의 삶, 평신도는 새복음화 주체, 대중문화복음화, ‘한국은 삼천년기 교회의 주역’(02/15) 등 신앙성과 복음화에 대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회내의 ‘여성사목’(02/22)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신영성운동, 본당서 막아야’(10/24)와 ‘신영성운동에 사목적 대응 절실’(09/26)이란 내용에서 교회내의 신영성운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대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사형대신 종신형’(08/01), ‘배아연구에 면죄부 주는가?’(07/11), 장애인에 대한 관심, ‘가난한 이 관심’(03/07), ‘진세계 굶주린 이에게 나눔을’(02/09) 등의 내용과 ‘북한이탈주민 사목’(08/08), ‘남남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07/04), ‘민족대단합’(06/20), ‘북동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05/02)이라는 제하로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운동, 여성 이주노동자 위한 배려(01/18)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http://catholictimes.org>)

종교정책(5.3%) 및 복지·이웃(4.1%) 등에 대해서도 고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유보적 입장을 지니며, 찬성 또는 반대의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협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보신문》은 불교종단내의 소식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27.4%), 기타 불교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32.1%) 정치·종교정책(9.5%), 사회·문화(9.5%), 환경·생명(7.1%), 여성·교육·가정(6.0%), 국제연대·협력(6.0%)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티벳관련한 내용과 달라이 라마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5회) 《주간불교》는 종단에 관련한 내용(37.5%)이외에 환경·생명(12.5%), 사회·문화(10.0%), 평화·통일(10.0%) 등의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12.5%)는 어느 종교 신문보다 많이 다루고 있어 불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치와 국제연대 및 협력 분야는 다루지 않고 있다.<sup>36)</sup>

원불교의 《원불교신문》은 교단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50.0%) 대내외적 것과 관련하여 사회·문화(9.5%), 복지·이웃(5.4%) 및 여성·교육·가정(5.4%) 분야에 관심을 두면서, 국제연대·협력(2.7%), 환경·생명(1.4%), 평화·통일(1.4%), 인권·노동(1.4%) 등에 대한 문제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sup>37)</sup> <시

36) 《주간불교》에 실린 사설을 구체적으로 보면, 불자인재육성, 동국학원 이사장 선임, 고도보존, 불교병원, 신계사복원불사, 조계종통합신도회, 한국여성불교, 휴가철 산사체험, 군순특별교구법, 불교 생태, 무늬만 바꾼 ‘벌빈조항 폐지안’(11/05) 등 불교 자체내의 문제에 대한 방향을 개진하고 있다. 대사회적 관점에서 북한 통천역 참사 인도적 지원(04/30), 6·15 4주년 남북교류 진기(06/18), 이명박 시장 망언에 대한 비판(07/09), 위안부문제(08/13), 외국인노동자(09/03) 장애인, 불우이웃, ‘빈그릇운동’ 국민·정부 동참(11/12) 등 대사회적 문제에 관심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칼럼>의 부분에서는 환경, 세간과 출세간, 거사불교, 노인복지, 참다운 불사 등에 대한 시론을 실고 있으나,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 갖고 쓰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http://www.bulkyonews.co.kr>)

37) 《원불교신문》의 사설내용 중 교단내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벽지교당 고층에 관심’(01/16), ‘예회, 주거지 교당으로’(01/30), ‘중앙총부는 희망’(02/06), 교화전략(02/20), 교화단회(02/20), 서울교구 교화방향 기대(03/05), 성직자 용금문제, 교무훈련, 복지시설, 원음방송, 여자정화단, 대각개교절, 종합정보시스템 문제없나(05/06), 지도자의 권한과 의무(05/21), 연원불 경배는 법의 실천(05/28), 원불교 자료실 이용(06/25), 사적관리(07/02), 신앙대상 호칭(07/23), 대중 의사 표출의 새로운 형태(07/30), 법인절(08/20), 국외 현지에서 교역자 배출, ‘천도보험(薦度保險)’개발(08/27), 인재발굴, 성공교화(09/17), 교단 문화상품(09/24), 금강산에 올린 상생·평화 합성(10/08), 교단경영과 전무출신 정년(10/22), ‘영산선학대학교’를 주목(10/29), 외국인선교소 지원(10/15), 순교감회의서 나온 교화 쓴소리(11/05), 새 활동 모색하는 UR운동(11/05) 등 교단내의 신앙, 의례, 교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통천역 폭발사고 돕기’(05/06), ‘다

론(時論)〉의 경우는 대체로 교단내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혼천도와 파병 반대’(07/02), ‘미국이여, 상생으로!’(11/05)의 내용만이 파병반대와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정치 및 국보법·사학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천도교는 《신인간》을 월간 잡지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신인간》은 월간이기에 〈개벽의 북소리〉, 〈신인간칼럼〉, 〈세상이야기〉, 〈신인간의 창〉 등에서 교단내적인 관심사와 대사회적 문제점을 논한 것을 다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보면, 교단내의 현안에 관한 내용이 비율이 가장 높고(34.5%), 여성·교육·가정 분야(17.2%)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생명(3.5%) 및 사회문화(6.9%)에 이르기까지 고루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38)</sup> 특히, 또한, 〈신인간의 창〉에서는 ‘FTA 협상과 우리의 대응’, ‘17대 총선의 의미와 천도교의 정치적 소회’, ‘대통령 탄핵안 기각에 대한 단상’, ‘이라크에서 날아온 비보’, ‘천도교 통일운동의 전망’ 등의 내용을 통해 통일운동, 평화, 생명운동, 대통령탄핵안 기각을 포함한 정치적 문제를 직접 다룸으로써 대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과 시론에 나타난 것만으로 각 종교신문의 사회문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사실과 시론은 여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대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자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내용은 일어난 사실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사학법 개정 등의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찬성, 유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 시론, 또는 사실 보도 등을 넘어서 사회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어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직 종교계에는 각 종단 최고 지도자의 견해를 일방향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의 여지를 두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여겨진다. 김수

시 떠오른 영광 핵폐기장(06/11),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희망을(06/18)’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wonnews.co.kr>)

38) 《신인간》의 〈개벽의 북소리〉에서는 ‘교단의 새출발’, ‘천도교 여성과 교역자’, ‘동귀일체하는 교단 풍토’, ‘교구활성화’, ‘성금문화’, ‘뿌리깊은 나무’ 등의 내용으로 교단이 지향해야 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신인간칼럼〉은 다양한 주제로 ‘어머니가 한울님!’, ‘수도기풍’, ‘정보화시대와 문화컨텐츠’, ‘4월의 지도자’, ‘도올 김용옥의 갈채’,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동귀일체의 신앙 문화’, ‘용담성지와 천일기념’ 등의 내용 등 다양한 목소리로 교단내적인 관심사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들을 담고 있다. 〈세상이야기〉에서는 ‘노동의 종말 시대 한 가운데에서’, ‘웰빙 사회’, ‘생명밥상운동’, ‘새로운 시대 여성의 활동’,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 대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환 추기경의 ‘국보법폐지 반대’ 발언에 대해서도, 가톨릭내에서 많은 인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는, 다른 경우이지만, ‘추기경을 이용하지 말라’라는<sup>39)</sup> 내용에서 추기경의 언행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경우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의 경우에도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종단의 방향에 대한 자성의 소리를 내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지도역량이나 방향성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달리 말하면, 언로가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거나 상호 세대간의 냉소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결과만을 도출할 위험성이 높다.

## V. 맺음말

시대의 요청에 따라 종교계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일제치하에서의 일본침략과 식민체제에 대한 동조와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고, 해방이후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유신체제를 옹호하거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동반자를 자처하기도 하였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자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교분리와 관련하여, 정치와 종교는 분리정책을 기본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의 사회참여와 정치의 종교계 활용은 두드러진 주변 현상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이 보수 기독교계의 선거운동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종교를 정치세력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변화하는 한국과 서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를 정치의 도구화로 삼으려는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종교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교단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지려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종교의 근본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언로(言路)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각 종단 지도자는 과거 교육의 결과이며, 신세대의 성직자 및 젊은 종교인에 대한 현재의 교육상태가 곧 미래의 종교지도자의 모습이다.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은 채, 교단 행정 책임자 또는 정신적 지도자가 내린 결정은 대중의 의견과 위반되거나 지도력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종단내부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때, 종합적인 사실 근거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39) 《카톨릭신문》 2004/02/08

종교인과 종교언론인은 시대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의 보편적 정신으로 일반사회를 향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종교신문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교단의 이익을 대체로 대변하는 기관지 및 목회·포교·교화를 위한 홍보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대체로 자신이 속하고 있는 교단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문제와 자신이 속한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완곡한 표현들을 통한 지적은 문제의 심각성을 덮어 두려는 안이한 태도로 보여진다.

자신의 교단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을 통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 및 평화 문제 등 대사회적 관심사는 토론의 장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모으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궁극적인 과제로 삼을 때, 국가보안법은 털고 가야할 제도이다. 해원상생(解冤相生)적 입장에서 한국 및 세계 인류역사의 구조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조화와 평등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 《參考文獻》

- 《가톨릭 신문》
- 《기독교신문》
- 《기독교연합신문》
- 《불교신문》
- 《시민운동연합신문》
- 《신인간》
- 《원불교신문》
- 《종교신문》
- 《주간불교》
- 《평화신문》
- 《한겨레신문》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2.

윤이흠, 《한국종교연구》권1, 서울: 집문당, 1986.

-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제12집,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3.
- 강인철, 〈민주화 과정과 종교 -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종교와 정치-〉 《종교연구》27 , 2002.
- 강태증, 〈정산종사의 교육사상〉 《원불교사상》24집, 2000.
- 김귀성, 〈종교교육과 인간성 회복〉 《정신개벽》14집, 신룡교학회.
- 김용복, 〈해방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 김인, 〈종교와 교육〉 《도덕교육연구》제11집 서울: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1999.
- 김인희, 〈교육목적관의 변천과정〉 《한국신교육의 발전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김중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학연구》vol. 20(no. 1),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1.
- 노길명, 〈광복이후 한국 종교와 정치간의 관계 -해방공간부터 유신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27집, 2002.
- 민성식, 〈사회변혁 위한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 준비시작〉 《한국시민사회연감 2004》, 시민의 신문, 2004.
- 박광수, 〈일제침략하의 원불교 농민운동〉 《원불교학연구》14집, 익산: 원광사, 1984.
- 박범진,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교육의 자유〉 《牧會》, 1995.
- 양건, 〈국가와 종교에 대한 법적인 고찰〉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2.
- 윤승용, 〈정교분리 상황하 종교교육의 방향〉 《한국종교연구회회보》vol. 1(no. 1), 서울: 한국종교연구회, 1989.
-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종교연구》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1986.
- 최종고, 〈정교분리원칙의 한국적 의미〉 《현대사회》25, 1987.
-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서울: 민족문화사, 1991.